

# 中國指導部의 保革葛藤 展開推移와 14全大會

文 興 鎬\*

## ▷ 目 次 ▷

- |                              |                                |
|------------------------------|--------------------------------|
| I. 序 論                       | III. 中國共產黨 第14次 全國代表大會에서의 政策變化 |
| II. 6·4 天安門 事件 이후 保革葛藤의 展開推移 | IV. 結 論                        |

## I. 序 論

중국공산당은 1989년 6·4天安門 사건 직후 趙紫陽 총서기를 축출하고 江澤民을 임용한 제13기 4中全會로부터 최근의 제14차 全國代表大會(14全大會; 1992.10.12~18)에 이르는 일련의 會議를 통하여 대내외적 곤경을 극복하기 위한 黨指導部의 結束과 政局의 安定에 주력하여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지도부내에서는 6·4天安門 사건의 評價와 事後處理, 경제난국 타개를 위한 經濟政策 方向의 設定, 蘇聯·東歐의 급격한 정치·경제적 변혁의 부정적인 영향 및 서방세계로부터의 「和平演變」 방지를 위한 社會主義 體制·理念의 강화, 지도부의 世代交替를 위한 人事改編 등과 관련된 保革葛藤이 지속되어 왔다.

---

\* 民族統一研究院 責任研究員

1992년 1월 鄧小平의 「南巡講話」는 당내 개혁세력의 입지를 강화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 즉 개혁세력은 개혁·개방정책의 강화 및 경제가 전의 필요성에 대한 鄧小平의 확고한 의지표명을 계기로 개혁·개방성과를 찬양하고 개혁·개방정책을 「보다 빠르고 과감하게」 추진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해 왔다. 또한 개혁세력은 黨·軍部의 지지기반 강화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는 한편 6.4천안문 사건 이후 보수·강경세력이 주도하고 있던 中央宣傳部·中央統戰部·文化部·人民日報 등 주요 기관에 대한 人事·組織改編을 적극 추진함으로써 보수세력의 입지를 크게 드러나게 약화시켰다.

중국공산당 14全大會는 그간의 당내 보혁갈등을 일단락 짓는 동시에 개혁세력을 중심으로 한 鄧小平 後繼體制의 기반을 구축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다. 즉 鄧小平이 강조해 온 「하나의 中心」(경제건설)과 「두 개의 基本點」(개혁·개방, 4개 기본원칙)을 중국적 특색을 지닌 사회주의 건설의 최고 지도방침으로 黨章에 명시하는 한편, 이의 지속적인 추진을 보장할 수 있는 지도체제를 강화하였다. 이는 곧 중국이 1978년 12월 중국공산당 제11기 3中全會 이후 14년간의 개혁·개방성과를 總決算하고 보다 높은 차원의 現代化建設을 위한 「社會主義 市場經濟體制」 확립의 전기를 마련한 것이다.<sup>1)</sup>

그러나 한편으로는 중국이 14全大會를 통해 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 확립 의지를 천명하고 개혁세력 위주의 鄧小平 後繼體制 구축을 가속화했다는 것은 반드시 중국지도부내의 갈등 終熄, 향후 政局의 安定 및 제반 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중국은 앞으로도 상당기간에 걸쳐 지도부의 세대교체를 마무리해야 할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성과가 미흡한 政治體制改革, 경제부문의 改革·開放 擴大 및 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 확립을 위한 부수적인 정책의 추진 등 극복

1) 江澤民 總書記는 14全大會의 政治報告를 통하여 “지난 14년간 국내외적으로 많은 사건들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중국공산당은 아무런 동요없이 經濟建設을 중심으로 하는 黨의 基本路線을 견지했으며 앞으로도 이를 확고부동하게 견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江澤民, “加快改革開放和現代化建設步伐奪取有中國特色社會主義事業的更大勝利,”(14全大會 政治報告 요약문), 「人民日報」, 1992년 10월 13일.

해가야 할 과제들이 산적해 있으며, 이러한 과정에서 당지도부의 대립과 갈등이 야기될 수 있는 가능성이 상존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韓·中修交 이후 한·중 관계발전은 물론 남북한 관계개선, 대외적 統一基盤造成 등의 측면에서 중국과의 다각적인 교류·협력을 필요로 하는 한국으로서는 중국지도부의 内部動向 및 대내외 정책방향의 變化推移를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

본 논문은 1989년 6·4 천안문 사건 이후 鄧小平路線의 제2도약을 위한 발판을 마련한 14全大會에 이르는 기간이 중국의 정치·경제·사회적 변혁에 극히 중요한 시기였다는 점을 감안하여 이 기간에 있었던 중국지도부의 보혁갈등 전개추이 및 14全大會에서 나타난 중국의 대내외 정책 변화방향을 분석하고자 한다.

## II. 6·4 天安門 事件 이후 保革葛藤의 展開推移

1989년 이후 중국지도부의 保·革葛藤은 改革·開放政策의 기본 방향, 우선 순위, 범위와 방식을 둘러싼 기존의 당내 대립이 蘇聯·東歐의 해체 이후 고조된 「和平演變」에 대한 위기의식, 新舊 世代交替를 의식한 당지도부의 權力暗鬭 등과 결부되어 확대·심화된 것이다. 과거 중국공산당내의 개혁파, 보수파는 兩者가 명확하게 구별되는 이념이나 노선에 따라 결집된 政治實體가 아니며 대부분 특정 문제·정책에 대한 입장, 私的인 人間關係 등을 중심으로 한 「人脈」의 성격이 강했다. 따라서 兩者の 구분이 분명치 않을 뿐만 아니라 政治狀況, 事案에 따라 대립양상을 달리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1989년 이후 중국공산당 지도부는 제반 정책의 결정·집행과정에서 비교적 선명한 對照를 보이는 개혁·보수세력으로 분리되는 경향을 보였으며 이들을 중심으로 당내 보혁갈등이 전개되어 왔다.

따라서 중국지도부의 보·혁갈등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서는 1989년 6·4 천안문 사건 이후 14全大會에 이르기까지 兩者關係의 변

화과정을 分析·檢討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본장에서는 보혁갈 등의 추이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 중국공산당 4中全會(1989.6), 7中全會(1990.12), 소련의 군부쿠데타(1991.8), 8中全會(1991.11), 「南巡講話」(1992.1), 9中全會(1992.10) 등을 분기점으로 시기를 구분하고 각 시기에 부각된 保革葛藤의 주요 측면을 분석하고자 한다.

#### 1. 6·4 天安門 事件과 보수세력의 입지 강화: 4中全會~7中全會

이 기간은 중국이 본격적인 개혁·개방정책을 추진한 이후 시종 劣勢에 처해있던 당내 보수세력의 입지가 강화된 기간으로 黨內人事變動, 經濟政策, 思想政治工作 등 주요 부문에서 보수세력의 주장이 대폭적으로 반영되었다. 또한 1989년의 민주화 시위를 「動亂」, 「暴亂」으로 규정하고 경제환경·질서의 「治理整頓」(정비정돈) 및 「反資產階級自由化」 운동을 강화한다는 측면에서 개혁·보수세력이 암묵적인 합의를 보았기 때문에 兩者的 노골적인 대립은 오히려 적었던 기간이기도 하다.<sup>2)</sup>

그러나 社會主義 路線의 堅持 및 공산당의 領導的 地位 固守 등 체제 유지에 핵심적인 부분에 대한 기본적인 합의에도 불구하고 중국공산당 내의 개혁·보수세력은 6·4사건 이후 일부 지도자의 更迭을 포함한 事後處理 및 경제정책의 조정과 관련된 구체적인 방침에서는 내면적인 대립을 지속하였다.

우선 중국공산당 제13기 4中全會에서는 資產階級自由化 요구를 효과적으로 제어하지 못하고 민주화 시위 당시 확고한 입장을 견지하지 못

---

2) 이러한 측면은 중국공산당 지도부가 改革派, 保守派를 不問하고 社會主義路線과 共產黨의 領導的 地位를 固守한다는 점에는 기본적으로 합의하고 있다는 점과 관련을 갖는다. 즉 1989년의 민주화 시위 과정에서 당지도부의 퇴진, 서구식의 政治的 多元主義 실현 등의 요구가 제기되자 중국공산당 지도부는 한결같이 이를 사회주의에 대한 근본적인 否定, 기존 체제의 顛覆企圖로 인식했다. 이와 관련된 중국지도부의 구체적인 입장은 “必須旗幟鮮明地反對動亂,” 「人民日報」, 1989년 4월 26일 社説; “在首都黨政軍幹部大會上李鵬同志的講話,” 「人民日報」, 1989년 5월 20일; “中共中央國務院告全體共產黨員和全國人民書,” 「人民日報」, 1989년 6월 5일; “在接見首都戒嚴部隊軍以上幹部時的講話,” 「人民日報」, 1989년 6월 28일 참조.

했다는 이유로 趙紫陽 總書記, 胡啓立 政治局常務委員, 閻明復 中央統戰部長을 축출하고 江澤民을 총서기로 전격 임용하였다. 개혁·개방정책의 선두주자였던 胡耀邦의 축출(1987.1.16)로 이미 위축되었던 개혁파의 입장에서 趙紫陽의 축출은 또 한차례의 큰 충격이었으며 기존 정책의 부분적인 수정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예고하는 것이었다. 다만 鄧小平은 趙紫陽의 축출로 인한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개혁파의 기존 입장과 정책을 최대한 유지할 수 있는 後續人事에 중점을 두었다.

경제정책과 관련하여 개혁·보수세력간의 갈등이 첨예화되었던 문제는 제13기 3中全會(1988.9.26)에서 결정된 「治理整頓」의 추진범위 및 기존 개혁·개방정책과의 관계를 설정하는 문제였다. 즉 개혁세력은 經濟過熱, 通貨膨脹, 관료의 不正腐敗 등 개혁 개방정책의 부정적인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경제부문에 대한 일련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점에는 동의하나, 이것이 기존 개혁·개방정책의 기본방향과 분위기를 저해해서는 안되며 개혁·개방정책을 더욱 深化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반면에 보수세력은 제13기 3中全會의 「治理整頓」 결정을 계기로 개혁 개방정책의 축소조정과 농업부문의 강화, 경제부문의 중앙통제·중앙집권화를 강화한 「鳥籠經濟」(극히 제한된 범위내의 개혁·개방경제)체제를 확립하고자 하였다.

보수세력의 이러한 의도는 「治理整頓」과 개혁·개방정책을 대립시키지 않으려는 개혁세력의 반대에 직면하기는 했지만 13기 5中全會(1989.11.6)에서 채택된 「진일보한 치리정돈 및 개혁심화에 관한 당중앙의 결제」(中共中央關於進一步治理整頓和深化改革的決定)의 많은 부분에 반영되었다. 즉 ① 경제성장률의 5~6%선 조정과 국민경제의 持續·安定·協助의 발전도모, ② 산업구조의 조정을 통한 농업부문의 강화, ③ 生產·建設·流通·分配部門의 심각한 혼란상황 극복 ④ 經濟·行政·法律手段이 종합적으로 운용되는 巨視的 統制體制 확립 등이 당면과제로 강조되었다.<sup>3)</sup>

---

3) 「人民日報」, 1989년 11월 10일, 11월 22일.

黨의 지도체제 강화 및 사상·이념교육과 관련된 부분에서도 보수세력의 입장이 강화되었다. 우선 당지도체제 문제와 관련하여 ① 中央과地方, 上級組織과 下級組織간의 관계에서 중앙집권, 거시적 관리의 강화, ② 각급黨委員會의 集團指導體制 및 紀律強化, ③ 농촌지역의 基層黨組織 강화 등이 강조되었으며 사상부문에서 마르크스·레닌주의와毛澤東思想의 기본 이론에 대한 학습의 중요성이 강조되었다. 이처럼 4中全會 이후 7中全會까지의 기간은 6·4천안문 사건의 후유증을 치유하는 기간으로 정치·경제·사회·문화의 전반적인 측면에서 보수세력의 입장과 주장이 강하게 나타났던 기간이다.

그러나 1990년 하반기에 접어들면서 경제건설과 개혁·개방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개혁세력의 주장이 다시 강화되면서 개혁 보수세력의 주장이 攻防하는 양상을 보였다.<sup>4)</sup> 또한 1990년 12월 25일에 개최된 7中全會를 전후해서는 개혁세력의 입장이 보다 강화되는 양상을 보였다.<sup>5)</sup> 예를 들어 江澤民 총서기는 11월 26일 심천경제특구 설립 10주년 기념식에서 경제특구의 구체적인 성과와 중국 경제발전에 미친 영향을 높히 평가하고 향후 중국의 특구정책을 보다 강화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으며<sup>6)</sup> 1990

4) 예를 들어 “安定은 모든 것을 壓倒한다”(「人民日報」, 1990년 6월 4일 社說), “團結은 곧 힘이다”(「人民日報」, 1990년 8월 5일 社說), “反자산계 금자유화를 부단히 堅持해야 한다”(「人民日報」, 1990년 8월 30일 社說)는 保守勢力의 주장이 각종 매체를 통하여 강조되는 한편 “經濟建設이라는 中心을 확고부동하게 견지해야 한다”(「人民日報」, 1990년 8월 29일 社說), “개혁 개방을 부단히 추진해야 한다”(「人民日報」, 1990년 9월 31일 社說)는 개혁세력의 주장 역시 계속 제기되었다.

5) 1990년 후반 개혁파의 입지가 강화된 배경에는 대내적으로 6·4사건 이후의 권력 구조 개편과정에서 宋平과 함께 政治局常務委員으로 진출한 李瑞環이 과거 胡啓立이 담당했던 당의 이데올로기·선전부문을 담당하면서 胡喬木, 鄧力群 등 대표적인 보수파 이론가들을 대대적으로 공격하기 시작했다는 점과 대외적으로 사우디와의 수교(90년 7월 21일), 인도네시아와의 재수교(90년 8월 8일), 싱가폴과의 수교(90년 10월 3일) 등으로 천안문 사태 이후의 국제적 고립상황을 점차 타개하기 시작했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6) 심천경제특구 설립 10주년 기념식 개최와 江澤民의 연설은 여러가지 의미를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즉 89년 이후 기존 경제정책에 대한 再檢討 및 整備·整頓에 중점이 두어졌던 당시의 상황에서 경제특구의 성과를 찬양하고 확대·강화 필요성

년 12월 30일 통과된 「國民經濟 및 社會發展의 10年 規劃과 8·5計劃에 관한 中共中央의 建議」 역시 「治理整頓」과 개혁·개방정책을 함께 강조하는 兩面性을 보이고 있기는 하나 개혁·개방, 경제건설을 통한 「強國富民」의 중요성이 보다 강조되었다.<sup>7)</sup>

## 2. 「姓社, 姓資」 논쟁과 개혁세력의 得勢: 7中全會~소련의 군부쿠데타

7中全會를 전후하여 입장이 강화된 개혁세력은 기존의 개혁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① 「八五計劃」, 「十年發展規劃」의 개혁·개방 정책 관련 부분 확대, ② 국무원의 핵심 보수세력인 李鵬, 姚依林의 견제책으로 朱鎔基, 鄭家華의 副總理 임용, ③ 胡啓立, 閻明復, 茹杏文 등 6·4사건 이후 축출된 개혁파 인사의 명예회복(平反) 및 復職,<sup>8)</sup> ④ 8中全會 및 14차 전국대표대회에서의 개혁·개방 확대 재확인 및 개혁세력 위주의 인사조치를 겨냥한 단계적인 전략을 추진하고자 했다.

개혁세력의 이러한 의도는 우선 1991년 1월 鄧小平이 上海지역에 머물면서 개혁·개방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각종 언론매체를 통해 이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鄧小平이 강조한 내용의 핵심은 ① 「計劃」과 「市場」은 자원배분상의 두 가지 形式·手段일 뿐 사회주의와 자본주의를 구분하는 唯一한 기준이 아니고, ② 商品經濟와 市場을 단순히 자본주의와 동일시하거나 外資의 이용을 自力更生과 대

---

을 강조한 것은 개혁세력이 7中全會를 앞두고 의도적으로 개혁·개방정책의 중요성을 부각시키고자 한 것으로 분석된다. 江澤民 연설의 原文은 「人民日報」, 1990년 11월 27일 참조.

- 7) 「中共中央의 建議」 第6章 “對外開放政策의 進一步 擴大”에서는 ① 基本國策으로서의 대외개방 지속, ② 對外輸出 증대를 위한 각종 정책의 시행, ③ 輸入의合理的인 按配와 각종 수입 규제 조치의 조정, ④ 外資의 효율적인 이용, ⑤ 沿海地域 경제발전의 進一步 관찰과 外向型 經濟의 적극적인 발전, ⑥ 對外貿易, 外換管理體制의 개혁 등을 강조하고 있다. 「中共中央의 建議」 全文은 「人民日報」, 1991년 1월 29일 「中共中央關於制定 國民經濟和社會發展十年規劃和‘八五’計劃的建議」 참조.
- 8) 이는 비록 原職으로의 復歸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6·4사건의 評價와 관련하여 대단한 象徵의 의미를 가진다. 또한 硬直된 政治霧靄氣의 완화, 개혁·개방정책 확대의 일환인 동시에 趙紫陽 문제 처리의 事前 準備作業의 성격을 띠고 있었다.

립시켜서는 안되며, ③ 개혁·개방과 경제건설을 위해 새로운 사고방식을 가져야 하며 思考의 硬直과 停滯에 빠져서는 안된다는 것이었다.<sup>9)</sup>

개혁·개방에 대한 鄧小平의 입장이 천명된 이후 上海市黨委의 기관지인 「解放日報」가 黃甫平이라는 필명으로 개혁·개방 확대와 관련된 대담한 주장을 제기하면서 보수세력에 대한 개혁세력의 본격적인 공세가 시작되었다. 黃甫平의 글에서 제기된 내용은 주로 鄧小平의 주장을 근거로 개혁·개방정책의 정당성 필요성을 보다 강조한 것이다.<sup>10)</sup> 개혁 세력의 적극적인 공세에 직면한 보수세력은 대표적인 보수이론가 鄧力群, 胡喬木 및 王忍之(中央宣傳部長), 高狄(人民日報 社長), 徐惟誠(中央宣傳部 副部長), 賀敬之(文化部 部長代理) 등이 주축이 되어 개혁파에 대한 반격을 전개했다. 그리고 이들의 주요 주장은 ① 개혁·개방정책의 확대·강화는 서방의 「和平演變」전략이 중국에서 이미 진행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며, ② 개혁·개방정책은 결과적으로 중국의 일부 영역에서 자본주의가 사회주의를 대체함으로써 사회주의체제 전반에 큰 위협이 되고 있으며, ③ 生產力만을 기준으로 하고 階級的 基準, 制度的 基準을 경시할 경우 국가의 정치·경제·사회생활 전반의 혼란을 야기하며, ④ 소련이 「색깔」을 바꾸게 된 관건은 고르바초프의 新思考政策이었으며, ⑤ 따라서 개혁·개방정책의 「姓資」, 「姓社」 문제를 분명히 규명해야 한다는 것이었다.<sup>11)</sup>

9) 鄧小平의 이러한 주장은 소위 「新貓論」으로 불리며 보수세력이 陳雲의 「鳥籠經濟」이론을 중심으로 ① 中央計劃의 강화, ② 下放된 地方權力의回收, ③ 개혁·개방범위의 대폭적인縮小를 주장하는 것을 비판하는 것이다.

10) 黃甫平이 제기한 구체적인 내용은 ① 개혁·개방정책을 보다 대담하고 빠른 속도로 추진하여야 하며, ② 개혁·개방의 실천과정에서 정당성이 증명된 정책은 결코 도태시킬 수 없으며, ③ 개혁·개방을 위해서는 사상적 경직성을 탈피한 새로운 사고방식(新思路)이 요구되며, ④ 개혁·개방정책에는 「姓社, 姓資」(사회주의적인 것인지 아니면 자본주의적인 것인지의 성격규명) 문제가 존재하지 않으며, ⑤ 計劃과 市場의 차이는 사회주의와 자본주의의 본질적인 차이가 아니라는 것이다. 「解放日報」, 1991년 3월 2일, 3월 22일 評論 참조.

11) 이 때부터 중국에서는 개혁·개방정책에 대한 「姓社」, 「姓資」논쟁이 본격화 되었으며 1991년 4~5월 중 中央宣傳部, 文化部, 人民日報, 北京日報, 光明日報 등 주요

보수세력의 강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改革·開放, 思想解放의 필요성에 대한 鄧小平의 강조 및 개혁세력의 당내 입지강화에 힘입어 1991년 전반기에는 대체로 개혁세력의 기본 입장이 단계적으로 관철되었는데 예를 들어 3월 25일에 개최된 제7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제4차회의에서는 朱鎔基, 趙家華가 副總理로 전격 임용되었고 6월에는 胡啓立, 閻明復, 芮杏文이 副部長級으로 복직되었다. 또한 趙紫陽의 過誤에 대한 재평가와 재등용 문제가 계속 거론되었다.<sup>12)</sup>

### 3. 蘇聯事態와 保革葛藤의 재연: 소련의 군부쿠데타~8中全會

소련에서의 군부쿠데타(1991. 8. 19~22) 실패 이후 엘찐 주도하의 급격한 정치·경제적 변혁 특히 蘇聯共產黨과 蘇聯邦의 解體는 중국지도부에 심각한 위기의식을 야기시켰으며 이에 따라 중국공산당내 보혁 갈등이 재연되는 결과를 초래했다.

중국은 1991년 8월 19일 新華社의 모스크바발 전문을 통해 소련의 군부 쿠데타 발생과 고르바초프의 사임, 야나에프(Yanaev)의 대통령직 승계 소식을 전달하는 한편 8월, 20일 外交部의 논평을 통해 ① 소련에

---

기관의 보수세력이 회합을 갖고 鄧小平을 포함한 개혁세력의 입장을 비판하였다. 특히 보수세력의 대표적인 이론가인 鄧力群은 「當代思潮」, 「黨建」, 「中流」 등 보수성향의 잡지들을 통하여 “姓社, 姓資를 不問하는 것은 일종의 위험한 政治的機會主義이자 資產階級自由化的 범람에 機會·土壤을 제공하는 것이며 國제적 敵對勢力의 和平演變 전략에 호응하는 것”이라고 비판하였다. 논쟁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峻風, “姓社姓資之爭緣何來, 陳雲主張子弟兵進中央,” 「鏡報」, 1991년 11월호, pp. 24~28 참조.

- 12) 당시 趙紫陽 처리문제와 관련하여 개혁·보수세력이 趙紫陽에 대한 「三不政策」에 합의한 것으로 전해진다. 즉 趙紫陽에 대해 ① 民主化示威와 관련된 政治的責任을 더 이상 추궁하지 않고, ② 공식적인 직책을 부여하지 않으며, ③ 그간의 조사에 대한 결론을 내리지 않는다는 점에 합의하였는데 이는 비록 복귀문제에 대한 합의를 얻지 못했다 하더라도 趙紫陽에 대한 당내의 입장이 상당히 완화되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한편 1989년 6월 이후 계속 대립해왔던 趙紫陽의 처리문제는 결국 1992년 10월 9일 13기 9中全會 결의를 통해 “趙紫陽同志의 過誤에 대한 13기 4中全會(1989.6)의 결론을 받아들이는 동시에 이에 대한 조사를 終結짓는다”는 점에 동의함으로써 당내 입장이 일단 정리된 것으로 분석된다. 「中國共產黨第十三屆中央委員會第九次全體會議公報」, 「人民日報」, 1992년 10월 10일.

서 발생한 변화는 소련의 内政이다. ② 각국 인민은 자신의 문제에 대한 決定權, 選擇權을 가지며 중국은 内政不干涉原則을 고수한다. ③ 소련인민이 자신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고 정치적 안정, 경제적 발전을 유지할 수 있다는 점을 확신한다. ④ 中·蘇관계는 이번 사태에 영향받지 않고 계속 발전할 것이라는 공식 입장을 표명했다.<sup>13)</sup> 또한 군부 쿠데타가 실패하고 고르바초프가 복권하자 錢其琛외교부장은 북경주재 소련 대사 솔로비에프(N. N. Soloviev)를 만나 ① 소련의 内政은 소련인민에 의해 자주적으로 해결되어야 한다, ② 중국은 소련인민의 선택을 중시 한다, ③ 1989년, 1991년 中·蘇共同聲明을 기초로 양국관계를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sup>14)</sup>

이상의 공식적인 입장 표명을 제외하고 중국은 고르바초프의 복권 이후 엘찐 주도하의 급격한 개혁조치에 대해 일체의 논평을 하지 않았으며 언론매체에서의 소련관련 보도를 철저히 통제했다. 소련의 변화에 직면하여 중국지도부는 과거 고르바초프의 급격한 정치·경제적 개혁조치에 대한 불만과 소련공산당 해체에 대한 위기의식으로 인해 개혁·보수세력이 인식을 같이하는 부분이 있었지만 이에 대처하는 구체적인 방식에 있어서는 역시 대립하는 양상을 보였다. 즉 7中全會 이후 守勢에 처했던 보수세력은 소련의 군부쿠데타, 공산당 해체를 계기로 개혁세력에 대한 비판을 재개했으며 中共中央에 대한 「進言書」를 통해 자신들의 입장을 제시하기도 했다. 이들의 주요 주장은 사회주의권 붕괴에 따른 체제위기 극복을 위한 ① 마르크스주의자들의 주요 부문 영도권 장악, ② 胡耀邦, 趙紫陽의 過誤清算을 통한 黨內 노선투쟁의 「大是大非」 판명 및 反자산계급자유화 투쟁범위 확대, ③ 경제부문의 資本主義, 社會主義 한계 설정, ④ 國營 大中型企業의 주도적인 지위 확립 및 三資企業, 私營企業, 個體經濟의 역할축소, ⑤ 株式制, 經濟特區, 開發區 등과 관련된 새로운 경제개혁조치에 대한 국가통제 강화 등이다.<sup>15)</sup>

13) 「人民日報」, 1991년 8월 21일.

14) 「人民日報」, 1991년 8월 23일.

15) 당시 보수세력의 전반적인 주장은 羅冰, “陳雲派攻趙紫陽第二,” 「爭鳴」, 1991년

반면에 鄧小平을 위시한 개혁세력은 사회주의권의 「巨變」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더욱 주동적으로 개혁·개방조치를 강화하는 동시에 경제·정치개혁을 통해 인민들이 더욱 많은 經濟的 惠澤과 政治參與 기회를 갖도록 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국가권력기구와 당내의 부패현상을 척결하여 개혁·개방정책의 설득력을 높혀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sup>16)</sup>

개혁·보수세력간의 입장차이는 1991년 9월 21일과 25일 두차례에 걸친 鄧小平, 陳雲의 회합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다.<sup>17)</sup> 두사람은 당내의 부정부패, 臺灣의 독립분위기 高潮, 中·美, 中·日關係 등에서는 별다른 이견이 없었으나 소련의 변화에 대한 대처방안 및 경제특구의 문제에 대해서는 첨예한 대립을 보였다. 즉 鄧小平은 소련의 변화와 관련하여 경제발전의 중요성을 강조한 반면 陳雲은 마르크스주의에 충실한 간부의 등용, 黨員과 幹部에 대한 사회주의 교육 강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경제특구와 관련하여 陳雲은 特區의 성과를 인정하나 이를 위해 지나친 代價를 지불했다는 점과 思想 意識上의 부정적인 영향을 결코

10월호, pp. 9~11 참조. 그 밖에 人事政策에 대한 保守勢力의 입장은 「人民日報」 91년 9월 1일자에 게재된 陳野平의 “德才兼備 以德爲主：論選拔幹部的標準”에 잘 나타나 있다. 이 글은 ① 德(政治思想的態度)과 才(能力)를 겸비한 간부를 선발하되 才보다는 德에 중점을 두어야 하며, ② 능력은 있으나 정치·사상적 태도와 品格이 불량한 간부를 임용할 경우 개혁·개방정책을 자본주의 방향으로 유도하고 전적인 서구화(全盤西化)를 도모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주장하고 있다.

16) 鄧小平은 ① 중국적 특색을 지닌 사회주의는 곧 중국과 소련의 상황을 구분하고 누가 어떻든간에 중국은 자신의 노선을 고수한다는 것이며, ② 사회주의는 한모양 일 수 없고 기본 原則·原理가 동일하다 해도 국가마다 처한 상황이 다르며, ③ 다른 국가가 사회주의를 훌륭히 실천하지 못했다는 것은 중국 역시 잘 실천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으며, ④ 개혁·개방노선은 취소될 수 없고 89년 이후 動亂이 재발하지 않은 것은 중국이 개혁·개방문제에서 동요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胡宇尖, “保守派要算胡與趙老帳，鄧小平再申十四大基調,” 「鏡報」, 1991년 10월호, pp. 30~33 참조.

17) 鄧小平과 陳雲의 회합은 改革·保守 兩大勢力を 대표하여 중요 현안을 논의한 「救亡會談」으로 평가된다. 鄧小平과 陳雲은 90년 9월 8일 회합하여 현안문제를 논의한 바 있는데 91년 9월 21과 25일 中南海에서 다시 두차례의 회합을 가졌다. 이 자리에는 江澤民, 李鵬, 喬石, 萬里, 彭真, 宋任窮, 楊尚昆 등이 배석했다.

과소평가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sup>18)</sup>

소련사태 이후 보수세력의 강화된 입장은 11월 25~29일에 개최된 8中全會에서 개혁세력의 일방적인 獨走를 제어하는 요인이 되었다. 즉 개혁세력은 8中全會를 통해 朱鎔基, 鄧家華, 楊白冰의 政治局 진입 등 인사변동 및 개혁 개방정책 강화와 관련된 조치들을 결정할 계획이었으나, 결국 「농업 및 농촌공작의 진일보 강화에 관한 중공중앙의 결정」과 「중국공산당 제14차 전국대표대회 개최에 관한 결의」만을 채택하였다. 여기에는 소련의 변화, 미국의 對중국 공세강화 등 외부로부터의 압력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논란의 여지가 많은 문제들을 다루기 보다는 우선 갈등요인이 비교적 작은 농업문제만을 다루려는 지도부의 의도가 중요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sup>19)</sup>

#### 4. 「南巡講話」와 改革·開放政策의 擴大: 8中全會~9中全會

##### 가. 鄧小平의 「南巡講話」

鄧小平의 「南巡講話」는 8中全會 이후 개혁세력이 당내 입지를 강화하게 된 직접적인 계기가 되었다. 즉 개혁세력은 1991년 12월~92년 1월 鄧小平이 上海, 심천, 珠海 등을 시찰하면서 강조한 내용을 종합한 「南巡講話」를 中共中央文件으로 채택하는 등(2월 11일 中央政治局擴大會議) 개혁·개방정책의 강화에 총력을 기울였다. 鄧小平이 일련의 지방 시찰을 통해 제기한 주장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 18) 經濟特區에 대한 鄧小平과 陳雲의 근본적인 시각차이는 “경제특구는 아직 試驗的인 運營段階이기 때문에 앞으로 경제특구를 新設해서는 안되며 그럴 경우 中央經濟의 崩壞를 초래할 것”이라는 陳雲의 주장에서 잘 나타나고 있다. 羅冰, “陳鄧的‘救亡’會談,” 「鏡報」, 1991년 11월호, pp. 13~15.
- 19) 당시 중국지도부는 소련의 농업개혁실패에 따른 식량공급 위기가 소련사회주의 체제의 근본적인 동요를 초래했다는 점과 1991년 중국 華東地域의 水害에 따른 농업부문의 강화 필요성 등에서 공동인식을 갖고 있었다. “中共中央關於進一步加強農業和農村工作的決定,” 「人民日報」, 1991년 12월 26일 참조.

1) 上海지역 시찰시의 발언 (1992. 1. 15)

① 모든 분야의 개혁은 중국적 특색을 지녀야 한다. 소련을 모방한 50년 대의 경제발전전략, 폐쇄적인 60년대 발전전략은 경제상의 退步를 가 져왔고 참혹한 대가를 치루었다. 이러한 과거 경험과 현실을 외면하고 教條主義의 태도로 批判, 反對를 일삼는 것은 마르크스주의의 實事求是적인 태도가 아니다.

② 만약 중국이 개혁·개방정책을 추진하지 않았다면 현재의 소련보다 더 큰 어려움에 직면했을 것이다.<sup>20)</sup>

2) 심천·珠海 경제특구 시찰시의 발언(1992. 1. 19)

① 사회주의노선을 따른다는 것은 곧 국가의 富強과 人民의 生活向上 을 도모하는 것이며 사회주의의 우월성은 실천을 통해 증명되어야 한다.

② 경제발전을 「中心」으로 해야 하며 또다른 「中心」은 없다. 향후 10 년 간의 경제성장을은 경제규율 및 기타 조건에 부합하는 전제하에 6%를 초과해야 한다.

③ 중국은 개혁·개방을 하지 않고서는 「出路」가 없으며 개혁·개방 을 보다 과감하고 빠르게 추진해야 한다. 개혁·개방은 자본주의의 유용한 방식을 활용하는 것을 포함해야 한다.

④ 개혁·개방의 확대 가속화를 위해서는 思想解放이 될받침되어야 하며 개혁을 추진하지 않는 사람은 물러나야 한다.<sup>21)</sup>

이처럼 鄧小平이 지방시찰과정에서 개혁·개방의 확대·강화를 통한 경제발전을 강조한 것은 첫째, 구소련의 大變革 이후 고조된 개혁·개방정책의 「姓資, 姓社」 논쟁을 종식시키는 동시에 개혁·개방을 통한 경제발전을 최우선 정책으로 견지한다는 점을 재확인하고, 둘째, 기존 개혁·개방정책이 創出한 성과의 상징인 경제특구의 긍정적 역할을 부각시키며, 셋째, 개혁세력의 당내 입지강화를 통하여 14全大會에서 개혁

20) 羅水, “鄧巡視五個省時反擊陳雲,” 「爭鳴」, 1992년 2월호, pp. 9~12.

21) 「文匯報」(홍콩), 1991년 2월 18일; 蔡詠梅, “鄧小平部署最後的鬪爭,” 「開放雜誌」, 1992년 2월호, pp. 8~9.

세력 중심의 후계체제 확립을 적극 지원하려는 의도를 담고 있었던 것으로 분석된다.<sup>22)</sup>

#### 나. 保守勢力의 失勢와 改革·開放政策의 가속화

「南巡講話」 이후 개혁세력은 鄧小平의 의도에 부응하여 각종 회의·언론매체를 통해 개혁·개방의 확대 필요성을 부각시키고 광범한 지지를 확보하는데 노력을 기울였으며 이러한 노력은 개혁·개방의 확대와 경제발전을 希求하는 대다수 「中國人民」으로부터 공감을 얻을 수 있었다.<sup>23)</sup>

개혁세력의 이러한 움직임에 대해 陳雲과 王震(國家副主席) 등 대표적인 보수세력들이 비판을 제기하였는데, 우선 陳雲은 서방의 공업화 모델에 의거한 전면적인 개혁·개방정책을 추진할 경우 필연적으로 사회주의 기본체제를 부정 전복하려는 세력이 출현하며, 결국 공산당의 영도적인 지위에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향후의 「中心工作」은 개혁 개방을 제한된 범위로 축소하고 和平演變 방지를 위한 확고한 사상·이념을 확립하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sup>24)</sup> 또한 가장 강력한 좌경적 발언을 해온 王震은 鄧力群, 李錫銘, 王忍之 등과 「緊急報告」(致中共中央委員會緊急報告)를 작성하여 「中共中央特別工作會議」 개최를 요구했던 것으로 전해지는데 이들의 주장 내용은 ① 당내에 反마르크스·레닌주의 思潮와 力量(走資派)이 존재하며, ② 개혁세력이 추구하는 노선은 자본주의

22) 鄧小平은 「南巡講話」 이후 처음으로 1992년 5월 22일 首都鋼鐵公司(首鋼)을 시찰하는 자리에서도 자신의 이러한 입장을 재침명하였다. 「鄧小平視察首鋼內情」, 「文匯報」(홍콩), 1992년 8월 5일.

23) 개혁세력의 論旨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자료로는 “進一步發揚改革精神,” (「人民日報」, 1992년 1월 13일 論評); “11期3中全會以來的路線要講一百年,” (「解放日報」, 1992년 2월 4일 論評); “更好地堅持以經濟建設為中心,” (「人民日報」, 1992년 2월 22일 社說); “對外開放和利用資本主義,” (「人民日報」, 1992년 2월 23일, 中國人民大學 經濟學教授 方生의 寄稿); “改革的膽子再大一點,” (「人民日報」, 1992년 2월 24일 社說); “新的歷史使命和中國共產黨,” (「人民日報」, 1992년 7월 1일 社說); “論解放思想,” (「人民日報」, 1992년 7월 4일 社說) 참조.

24) 溫輝, “鄧小平路線與中國前途,” 「爭鳴」, 1992년 5월호, pp. 35~39.

노선이라는 것이다.<sup>25)</sup> 그밖에 1992년 2월 중순 陳雲, 李先念, 王震, 王任重, 陳作霖, 鄧力群, 胡喬木, 賀敬之 등 中央顧問委員, 中央委員, 中央紀律檢查委員 35명은 鄧小平에게 자신들의 입장을 書面으로 제시했던 것으로 전해졌다.<sup>26)</sup>

그러나 개혁세력은 보수세력의 不滿과 批判에도 불구하고 과거에 비해 더욱 강경한 태도로 자신들의 입장을 관철하였다. 즉 과거와 같이 보수세력과의 단순한 理論論爭에 그치지 않고 개혁·개방정책에 장애가 되는 세력을 과감히 제거하겠다는 의지를 보였으며 軍部의 확고한 지지 확보에도 역점을 두었다. 이에 반해 보수세력은 개혁·개방정책의 강화와 관련된 개혁세력의 大攻勢를 제어하기 위해 나름대로의 對應論理와 주장을 계속 피력하였지만 개혁·개방 강화 추세를 제어하기에는 力不足이었다. 더욱이 일부 보수세력이 개혁·개방의 강화를 支持하는 쪽으로 입장을 바꾸는 움직임마저 보임으로서 보수세력의 당내 입지가 더욱 약화되었다.<sup>27)</sup>

이처럼 鄧小平의 「南巡講話」를 고비로 6·4 천안문 사건 이후 심화된 중국 지도부의 보혁갈등은 개혁세력의 입장을 중심으로 마무리되는 양상을 보였다. 그리고 이는 중국지도부내의 상충된 입장이 어느 한쪽으로 정리되었다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즉 보수세력이 강조해 온

25) 峩山, “狂襲開明派的反氣旋,”「爭鳴」, 1992년 2월호, pp. 16~17.

26) 이를 주장의 핵심은 ① 마르크스·레닌주의를 중심으로 한 당의 기본노선견지, ② 사회주의 노선을 이탈한 정책방향의 즉각적인 시정, ③ 共產主義思想, 共產主義理想, 共產主義 道德의 강화를 위한 당내 整風運動 추진, ④ 전국 企業, 學校 및 기타 기관에서의 사회주의 思想·氣風에 대한 宣傳·教育 실시, ⑤ 「反和平演變」 투쟁의 확대, ⑥ 사회주의 기본성격을 상실하지 않은 개혁·개방 추진 등이다. 羅水, “陳雲派的大反撲,”「爭鳴」, 1992년 4월호, p. 12 참조.

27) 이러한 움직임의 대표적인 예는 李鵬의 태도변화에서 찾을 수 있다. 즉 李鵬은 개혁·개방 강화에 대한 입장변화와 관련하여 8中全會 이후 계속 주목을 받아 왔는데 특히 유럽방문과 유엔 安保理 常任理事國 정상회담 참석차 뉴욕을 방문(1992. 1. 27~2. 7)하는 중에 자신의 保守, 強硬 이미지 쇄신에 각별한 신경을 썼다는 평가를 받았다. 李鵬의 입장변화에 관해서는 羅水, “李鵬一家的和平演變,”「前哨」, 1992년 2월호, pp. 8~9; Lincoln Kaye, “Diplomacy boosts Li Peng's political standing,” Far Eastern Economic Review (30 January 1991), pp. 15~16 참조.

「治理整頓」 및 「鳥籠經濟」의 틀을 벗어나지 않고서는 개혁·개방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결국 「四個現代化」를 실현할 수 없다는 개혁세력의 입장이 「中國人民」의 전폭적인 支持를 받았음을 의미한다. 바로 이러한 人民의 支持는 개혁세력이 14全大會에서 자신들의 정책노선을 확립할 수 있었던 원동력이었다.

### III. 中國共產黨 第14次 全國代表大會에서의 政策變化

#### 1. 鄧小平 後繼體制의 基盤 構築

鄧小平을 핵심으로 하는 개혁세력의 궁극적인 목표는 1989년 천안문 사건 이후 지속된 당내 保革葛藤의 終熄, 개혁·개방정책의 침체국면 타개에 그치지 않고 자신들의 정책노선을 장기적으로 계승할 수 있는 後繼體制를 확립하는 것이다.

개혁세력의 이러한 의도는 특히 鄧小平의 「南巡講話」 이후 더욱 뚜렷하게 표출되었다. 즉 개혁세력은 그 동안 당내 입지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쳐 온 鄧小平의 死亡 혹은 活動不能 상황에 대비한 후계체제 확립 필요성을 절감하고, 보수세력과의妥協를 통해 개혁·개방정책을 추진해온 기존방식에서 벗어나 개혁 개방정책에 반기를 드는 세력을 과감히 除去하고자 하는 적극적인 입장을 보였으며 13기 9中全會, 14全大會, 14기 1中全會(1992.10.19)를 통해 자신들의 목표를 상당부분 관철하였다.

우선 개혁세력은 후계체제 확립여부에 중요한 變數가 되는 中央委員會, 政治局, 政治局常務委員會, 書記處 등 주요 당조직에서 보수세력을 거세하고 신진개혁세력을 대거 영입시킴으로써 자신들의 당내 지지기반을 공고히 했다. 중앙위원회의 경우 189명의 中央委員과 130명의 中央候補委員을 선출했는데 이중에서 새로 영입된 인원이 전체의 46.7%를 차지하며 이들중 대부분이 대학이상의 교육을 받은 젊은 개혁지지세력

이다. 정치국은 총 20명으로 확충되었는데 이중에서 기준의 政治局員은 7명 뿐이며(정치국 후보위원이던 丁關根 포함) 13명이 새로 영입되었다.<sup>28)</sup> 중국공산당의 최고지도부라고 할 수 있는 정치국상무위원회는 기준의 6명중에서 2명(姚依林, 宋平)이 퇴진하고 3명(朱鎔基, 劉華清, 胡錦濤)이 추가되었다.<sup>29)</sup> 그 밖에 中央書記處는 丁關根, 溫家寶(후보서기에서 서기로 승진)를 제외하고 胡錦濤, 尉健行(國務院 監察部長), 任建新(最高人民法院院長)이 영입되었다.

鄧小平 後繼體制의 확립과 관련, 개혁세력이 주요 당조직에서의 보수 세력 去勢 및 개혁지지세력의 영입과 함께 주안점을 두어왔던 또 다른 문제는 보수 강경세력의 주요 근거지라고 할 수 있는 中央顧問委員會의 해체와 군부의 지지를 강화하는 것이었다. 陳雲이 主任을 담당해 온 中央顧問委員會의 해체문제는 1991년 초부터 계속 제기되어 왔으나 보수 원로 세력의 심한 반발때문에 본격적으로 추진되지 못하였다. 그러나 1991년 12월 고문위원회의 기능에 대한 鄧小平의 입장표명을 계기로 개혁세력은 고문위원회 해체작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여 왔으며 결국 14전대회에서 통과된 黨章改正案에 고문위원회 폐지를 명시하였다.<sup>30)</sup>

- 
- 28) 14全大會에서 퇴진한 政治局員은 萬里, 李錫銘, 楊汝岱, 楊尚昆, 吳學謙, 秦基偉, 姚依林, 宋平 등 8명이며 새로 영입된 정치국원은 朱鎔基, 劉華清, 胡錦濤, 楊白冰, 吳邦國, 鄒家華, 陳希同, 謝非, 譚紹文, 姜春雲, 尉健行, 錢其琛, 李嵐清 등 13명이다.
- 29) 政治局常務委員會의 인사개편에서는 보수세력의 退陣과 개혁세력의 得勢가 가장 확연하게 들어나고 있다. 姚依林과 宋平은 보수적인 성향을 가졌던 자들로 개혁세력이 제거의 대상으로 지목했던 인물이다. 반면에 새로 영입된 朱鎔基, 劉華清, 胡錦濤는 신진개혁세력의 대표적 인물이며 앞으로 朱鎔基는 姚依林이 담당했던 경제부문을, 胡錦濤는 宋平이 담당했던 당내 組織·人事부문을, 劉華清은 國防부문을 담당할 것으로 보인다.
- 30) 顧問委員會 解體와 관련된 鄧小平의 입장은 ① 고문위원회는 1982년 9월 1~11일의 中國共產黨 第12次 全國代表大會에서 元老幹部들의 終身制 폐지를 위한 過渡期의인 조치로서 일정기간만 존속한다는 조건하에 설립되었으며, ② 顧問委員은 단지 建議權만을 가질 뿐 최종 決定權은 黨 위원회에 있고, ③ 고문위원회가 당위 위원회의 결정에 관여하는 것은 黨章에違背되는 越權行爲라는 것이다. 明萍, “鄧談 ‘顧問委員會’職權,” 「鏡報」, 1992년 1월호, p. 39 참조.

개혁·개방정책, 江澤民 指導體制에 대한 군부의 지지확보 문제는 그 동안 鄧小平이 각별히 신경을 썼던 문제이다. 즉 鄧小平은 江澤民이 비록 1989년 11월 13기 5中全會에서 자신의 中央軍事委員會 주석직을 승계하였지만 군부내 지지기반이 취약하다는 점을 감안하여 江澤民 지도체제에 대한 군부의 지지 확보에 역점을 두어 왔다. 사실 鄧小平은 1992년 1월 경제특구 시찰시 楊尚昆, 楊白冰, 張愛萍, 劉華清, 朱敦法 등 군부 실력자를 대거 대동하는 한편 군부 將星들로 하여금 경제특구를 직접 시찰하도록 함으로써 개혁·개방정책에 대한 군부의 지지확보를 적극 도모하였다. 또한 자신의 측근이자 군부의 실력자인 劉華清, 楊白冰 등을 통해 각종 회의, 언론매체에서 中國人民解放軍의 당면과제가 군에 대한 당의 절대적인 영도권 보장 및 개혁·개방정책의 확고한 수호자로서의 역할 수행이라는 점을 강조하도록 했다.<sup>31)</sup> 이러한 노력에 힘입어 14全大會에서 단행된 中央軍事委員會 인사개편에서는 江澤民을 정점으로 劉華清을 부주석, 張震(國防대학장), 遲浩田(總參謀長), 張萬年(濟南軍區司令官), 于永波(總政治部 主任), 傅全有(蘭州軍區司令官)를 中央軍事委員으로 하는 조직체계를 확립함으로써 江澤民體制의 군부내 지지기반을 강화하였다.<sup>32)</sup>

31)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中國人民解放軍 기관지 『解放日報』는 3월 14일자 社說을 통하여 개혁·개방정책에 대한 지지입장을 표명했으며 全人大 제5차회의 기간(3. 20~4.3)에는 「兩會隨筆」이란 특별지면을 통해 개혁·개방정책의 강화 필요성과 軍部의 적극적인 지지를 강조했다(「文匯報」(홍콩), 1992년 3월 29일자에서 재인용). 또한 人民解放軍 總政治部은 全軍에 대한 「通知」(6월 15일)에서 6월 14일 江澤民이 中央黨校에서 행한 연설(「鄧小平同志의 南巡講話 精神을 전면적으로 관철하는 동시에 역량을 집중하여 經濟建設과 改革·開放을 신속하게 실천하자.」)의 주요 내용을 중심으로 思想解放 및 左의 防止 필요성을 강조했다. 「人民日報」, 1992년 6월 16일 참조.

32) 中央軍事委員會의 인사개편에서 주목을 받은 문제는 군부의 최고 실력자로서 鄧小平路線에 협력해 온 楊尚昆과 楊白冰 형제의 퇴진이다. 일부 관측자는 이를 「楊家軍」으로 지칭되던 두사람의 去勢로 분석하기도 하나 이러한 분석은 문제를 안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楊白冰이 政治局員에 임용되었고 楊尚昆의 퇴진 역시 鄧小平과의 관계를 감안할때 일방적인 去勢라기보다는 協議에 의한 一線退陣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 2. 社會主義 市場經濟의 指向

「南巡講話」 이후 개혁·개방정책의 확대를 통한 경제발전을 당·국가의 최우선적인 정책으로 설정한 개혁세력이 경제부문에서 의도해 온 것은 1978년 이후 견지해 온 「四個現代化」 노선의 제2도약을 위한 수단으로서 市場經濟 요소가 대폭 확대된 社會主義 市場經濟體制를 확립하는 것이었다.

결국 14全大會에서는 鄧小平이 강조해 온 「하나의 中心」과 「두개의 基本點」을 중국적 특색을 지닌 사회주의 건설의 最高 指導方針으로 확정하는 동시에 江澤民의 정치보고를 통해 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의 확립이 경제체제개혁의 궁극적인 목표라는 점을 천명하였다.<sup>33)</sup> 따라서 중국은 앞으로 개혁·개방정책의 확대에서 한 차원 더 나아가 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 확립이라는 큰 목표속에서 농촌경제, 도시경제, 대외경제 등 각 부문의 개혁·개방정책을 가속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 가. 農村經濟

농업부문에서는 우선 產業構造의 調整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농촌에서의 산업구조 조정문제는 과거 보수세력과 개혁세력이 대립해 온 문제다. 즉 개혁세력은 농촌지역 잉여노동력의 비농업부문으로의 轉移가 없이는 농업현대화의 실현이 불가능하다는 인식을 갖고 있었던 반면에 보수세력은 농민들의 轉業 추진을 반대해 왔다.<sup>34)</sup> 그러나 앞으로는

33) 江澤民총서기는 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장기간의 노력이 요구된다는 점을 전제하고, 「社會主義 市場」의 주요 특징으로서 ① 국가의 거시적인 통제하에 資源分配의 기초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② 제반 경제활동이 價值規律을 준수하고 需要供給 관계에 적응하도록 한다, ③ 가격과 경쟁메커니즘의 기능을 통해 자원배분상의 效率을 極大化하며 기업에 적자생존(優勝劣汰)의 원칙을 적용시킨다, ④ 각종 경제징후나 반응에 민감하게 작용하여 생산을 촉진하는 동시에 수요공급을 즉각적으로 조절한다는 점을 강조했는데 「社會主義 市場經濟體制」는 바로 이러한 사회주의 시장이 국가경제 운용의 주요 수단으로 확립된 경제체제를 의미한다. “14全大會 政治報告 要約문”, 「人民日報」, 1992년 10월 13일 참조.

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 확립의 일환으로 농촌지역에서 다양한 경제형식이 발전하는 동시에 농민의 2차, 3차 산업으로의 轉移가 가속화 될 것으로 보인다.<sup>35)</sup>

그 밖에 농촌의 산업구조 조정과 결부되어 적극 추진될 것으로 보이는 것은 농촌의 治水·灌溉事業 등 기본건설에 대한 투자확대<sup>36)</sup> 및 鄉鎮企業에 대한 지원·육성이다. 중국의 향진기업은 6·4천안문 사건 이후 「治理整頓」의 영향으로 축소조정되었으나 최근 농업현대화, 산업구조 조정의 주요 수단으로 향진기업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점차 활력을 되찾고 있다.<sup>37)</sup> 앞으로는 1992년 3월 國務院 農業部가 마련한 「향진기업의 지속적인 발전 촉진에 관한 보고」(關於促進鄉鎮企業持續健康發展

34) 농업부문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개혁세력, 보수세력을 불문하고 중국의 원로지도부들이 공동인식을 갖고 있다. 즉 ① 이들은 1978년 이후 11억여 인구가 “배불리 먹고 따뜻하게 입는 문제”(溫飽問題)를 해결할 수 있었던 것은 농촌에서의 개혁이 성공했기 때문이고, ② 앞으로도 농업부문은 기타 부문의 발전을 위한 기본적인 원동력이며, ③ 중국공산당이 영도하는 「人民政權」의 최대支柱는 역시 전인구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농민이라는 점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 다만 보수세력은 농민들의 集體意識 弱化, 농촌지역 基層黨組織의 통제력 弛緩 등의 문제에 집착하여 농촌에서의 社會主義教育(社教) 강화 등을 강조한 반면 개혁세력은 농민들의 적극성을 저해할 수 있는 조치를 억제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해왔다. 陳祖鈴, “農民問題乃是中國社會主義建設的根本問題,” 「農業經濟問題」, 1991년 12월호, pp. 28~29 참조.

35) 14全大會에 참가한 溫州市 당위원회 서기 孔祥有의 발표에 따르면 온주시의 경우 지금까지 150만명의 농민이 제2, 3차 산업으로 轉業하였으며 이들이 온주시 국민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978년에는 36.5%였으나 1991년에는 72.4%로 증가했다. 물론 온주시가 농촌경제체계개혁의 시범지역으로서 다른 지역에 비해 개혁의 성과가 높았다는 점을 감안해야 하나 앞으로는 기타 지역에서도 이와 유사한 변화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孔祥有, “溫州發展社會主義市場經濟的實踐與思考,” 「人民日報」, 1992년 10월 19일 참조.

36) 3월 21일 제7기 全人大 5차회의에서 王丙乾 財政部長이 발표한 92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농업부문의 예산은 前年對比 7.2% 증가한 259億9800萬元이다. “關於1991年國家豫算執行情況和1992年國家豫算草案的報告,” 「人民日報」, 1992년 4월 6일 참조.

37) 91년의 경우 鄉鎮企業의 연간 총생산량은 1兆 1000億元(人民幣)이며 이중에서 工業總生產이 8500億元(전국공업총생산의 1/3)에 달했다. 晨鐘, “人大會議前夕中共最新形勢,” 「廣角鏡」, 1992년 2월호, p. 19.

的報告)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① 국영 大·中型企業과의 연계강화를 통한 新商品·輸出商品 개발·생산의 적극적인 지원, ② 합리적인 계획 수립과 정확한 지도, ③ 행정기관의 간섭 배제, ④ 내부경영·관리 강화를 위한 조치들이 적극 추진될 것이다.<sup>38)</sup>

#### 나. 都市經濟

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의 확립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역시 도시경제 부문이다. 도시경제 부문에서의 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 확립과 관련하여 14全大會 政治報告에서 강조된 것은 ① 국영 大中型企業의 생산·경영메커니즘 개혁, ② 市場體系의 조속한 육성, ③ 分配制度와 社會保障制度의 개혁, ④ 정부의 職能轉換을 통한 政企分離의 가속화 등이다.<sup>39)</sup>

우선 도시경제 부문의 주축을 이루고 있는 국영기업의 개혁·활성화 문제는 중국이 도시경제체제 개혁을 추진한 이래 계속 제기되어 온 문제인 동시에 개혁·보수세력이 침예한 대립을 보였던 문제이다.<sup>40)</sup> 현재 중국의 국영기업 중 經營成果가 비교적 양호한 기업은 전체의 1/3정도이고 나머지는 가까스로 현상을 유지하고 있거나 回生不能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는데, 鄧小平의 「南巡講話」 이후 개혁세력은 청부경영책임제 확대, 인사제도의 개혁, 임금분배 및 사회보장제도의 개혁 등 국영기업의 경영메커니즘 전환에 중점을 두면서 개혁을 추진해왔다.<sup>41)</sup> 江澤民의 14

38) 國務院 農業部가 향진기업의 활성화를 위한 지원정책으로 제시하고 있는 것은 ① 적극적인 지원(積極扶持), ② 합리적인 계획(合理規劃), ③ 정확한 지도(正確引導), ④ 관리강화(加強管理) 등이다. “堅持不懈促進鄉鎮 企業健康發展,” 「人民日報」, 1992년 3월 30일 참조.

39) “第14全大會 政治報告 要約문”, 「人民日報」, 1992년 10월 15일.

40) 改革·保守세력이 대립했던 대표적인 예로는 1991년 9월 23~27일에 개최된 바 있는 「國營大中型企業 活성화를 위한 中共中央工作會議」를 지적할 수 있다. 여기에서 보수세력은 公有制를 주체로 하는 경제원칙을 견지하기 위해 국영기업이 차지하는 중요성을 결코 과소평가할 수 없다는 점과 지속적인 지원 필요성을 강조했다. 반면에 개혁세력은 국영기업이 經營·管理 수준의 提高 및 技術改造를 통해 自主經營, 獨立採算이 가능한 社會主義商品生產者·經營者로 성장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人民日報」, 1991년 9월 28일.

全大會 정치보고에서도 역시 그 동안 개혁세력이 국영기업의 활성화를 위해 추진해 온 정책들이 강조되고 있다. 즉 “財產權의 합리적인 조정, 政企分離, 자주권확대를 통하여 국영기업이 자주적인 경영·발전·통제 능력을 갖춘 진정한法人 혹은 市場競爭의 主體가 되도록 해야 한다”<sup>42)</sup>는 점이 강조되었다.

도시경제부문의 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 확립과 관련하여 두번째로 강조되고 있는 문제는 株式·債券등 유가증권시장을 포함한 金融市場<sup>43)</sup> 및 기술·노무·정보·부동산시장의 발전을 통하여 전국적으로 統一·開放된 市場體系를 확립하는 문제다. 또한 시장육성과 시장경제체제개혁의 관건적인 부분으로서 價格改革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데 가격 관계의 합리적인 조정을 통하여 市場價格 위주의 가격메커니즘을 수립 해야 한다는 점이 강조되고 있다.

41) 국영기업의 개혁에 관한 중국지도부의 보·혁갈등은 李鵬총리가 3월 20일 全人大政府工作報告를 통해 “국무원은 이미 국영기업의 경영메커니즘 전환을 위한 잠정조례 제정에 착수했으며 여기에는 청부경영책임제 확대, 인사제도의 개혁, 임금분배 및 사회보장제도의 개혁이 포함된다”(「人民日報」, 1992년 3월 21일)는 점을 명시함으로써 일단 개혁세력의 입장으로 일단락되었다. 그 이후에도 중국은 기업 개혁의 필요성과 정당성을 계속 역설해왔는데 이와 관련된 자료는 國家體制改革委員會가 발표한 “1992年經濟體制改革要點,” 「人民日報」, 1992년 3월 29일; “深化企業內部三項制度改革,” 「人民日報」, 1992년 4월 12일 論評; “論企業改 革與工人階級,” 「人民日報」, 1992년 5월 28일 論評 參照.

42) “第14全大會 政治報告”, 「人民日報」, 1992년 10월 15일.

43) 금융시장의 육성과 관련하여 중국은 92년 1월 14일 上海의 真空電子器件股分有限公司가 액면가 420元(人民幣)의 주식을 발행한데 이어 심천시의 일부기업에서도 이미 주식발행을 허용했다. 특히 최초의 證券去來所를 설립한 上海에는 이미 美英·日·佛의 주요 금융기관들이 상해지점을 개설하거나 中外合資형태의 「國際財務公司」 혹은 「聯合財務公司」를 설립하였다.(「人民日報」, 1992년 3월 4일). 중국의 주식제도는 아직까지 經驗과 法的 制度의 未備, 需給不均衡 등의 문제점을 안고 있기 때문에 1992년 8월 9일 심천시에서의 대규모 소요사태와 같은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중국지도부는 ① 국영기업의 자금조달 및 관리 감독 등 경영방식의 전환, ② 약 2000억 달러로 추산되는 민간소유 유휴자금의 생산성 자금으로의 전환, ③ 外資導入 확대 등을 위한 주요 수단으로서 주식제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기본 방침을 갖고 있으며 14全大會에서도 이러한 입장이 재삼 강조되었다.

分配制度 및 社會保障制度의 개혁 역시 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 확립을 위한 중요한 부분으로 강조되고 있다. 여기에서는 國家, 集體, 個人의 이익을 함께 고려하고 國家와 企業, 中央과 地方의 관계를 합리화하는 문제와 稅制改革 문제가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그밖에 賃金制度의 개혁을 통하여 각 企業, 事業, 機關의 특성을 감안한 獨子的인 賃金制度를 수립해야 한다는 점이 강조되고 있다.

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 확립의 중요한 부분으로 강조되고 있는 마지막 문제는 政企分離를 통한 정부의 職能轉換이다. 政企分離는 이미 도시경제체제개혁의 필수적인 부분으로서 강조되어 왔던 문제이지만 제대로 실천되지 못했다. 이번의 14全大會에서는 이 문제와 관련하여 “국가가 기업의 職權으로 규정한 부분에 대해 정부가 관여해서는 안될 뿐만 아니라 기업에 이미 移讓하기로 결정한 權限을 中央政府 혹은 地方政府가 계속 가지고 있어서는 안된다”<sup>44)</sup>는 점을 분명히 했다.

#### 다. 對外經濟

「南巡講話」 이후 대외경제 부문의 개혁 개방정책은 경제특구를 窓口로 한 외국의 資本·技術導入, 三資企業(中外合作, 中外合資, 外國獨資企業) 육성, 대외무역 증대 등 기존 정책을 확대·강화하는 동시에 自由貿易港과 같은 새로운 형태의 經濟特區, 沿海開放都市, 尖端技術開發區 등을 설립하여 경제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하도록 한다는 방향에서 추진되고 있다.<sup>45)</sup> 특히 14全大會의 정치보고를 통해 「全方位開放」의 필요성

44) “第14全大會 政治報告”, 「人民日報」, 1992년 10월 15일.

45) 기존 정책의 확대·강화 방식으로는 외국기업의 투자조건 개선, 三資企業의 주식 발행 허용, 中外合作企業의 外國獨資企業 전환 등이 추진되고 있으며 새로운 형태의 경제특구로는 福建省 廈門시의 自由貿易港화, 외국기업에 장기임차를 허용하여 대규모 공업단지를 조성하도록 하는 海南島 洋浦港 개발, 天津 大連市의 외국기업 전용공단 조성 등이 적극 추진되고 있다. 또한 최근 국무원은 全方位對外開放 방침을 확정하고 楊子江 유역의 重慶·岳陽·武漢·九江, 북부지역의 하얼빈·長春·呼和浩特·石家莊, 중남부 지역의 太原·合肥·南昌·長沙 등의 개방을 확정했다. 「文匯報」(홍콩), 1992년 9월 14일 참조.

을 역설함으로써 대외경제부문에서의 개혁 개방이 더욱 가속화 될 것이다.

대외경제 부문과 관련하여 14全大會에서 강조되고 있는 것은 ① 대외 개방 지역의 확대, ② 外資利用 범위의 확대, ③ 대외무역의 多元化 등이다. 우선 대외개방지역 확대 조치의 일환으로 기존의 연안지역 대외 개방을 내륙지역 省・自治區의 대외개방으로 진일보 확대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으며, 외자이용 범위의 확대를 위해 외국기업에 양호한 投資條件 및 충분한 法的保障을 제공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그 밖에 대외무역의 다원화 및 外向型經濟의 발전을 위해 사회주의 시장경제에 부합되는 새로운 형태의 대외무역체제가 수립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 3. 獨立・自主的인 全方位外交 推進

중국이 대외정책의 추진과정에서 직면하고 있는 難題는 「和平演變」에 대한 효율적인 견제와 개혁・개방정책의 확대 강화를 위한 외교적 지원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즉 중국은 서방국가들과의 관계에서 소련의 몰락 이후 가중되고 있는 和平演變에 대한 경계를 소홀히 할 수 없는 동시에 개혁・개방정책의 확대・강화 및 새로운 국제질서 수립과정에서의 政治・經濟・外交의 입지강화를 위해서는 이들과의 관계발전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이러한 대내외적 곤경속에서 중국은 「南巡講話」 이후 개혁・개방정책의 강화와 함께 대외정책에 있어서도 6.4천안문 사건 이후의 守勢의 입장장을 탈피하여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全方位外交를 추진한다는 입장을 보여 왔다.<sup>46)</sup> 14全大會에서 제시된 대외정책 방향에서도 ① 現代化

46) 중국의 이러한 입장변화는 和平演變에 대한 지나친 危機意識으로 인해 美國을 비롯한 주요 서방국가들과 냉각된 관계를 지속할 경우 국제적으로 더 많은 적대세력을 만들어 중국의 국제적 영향력을 약화시키고 결과적으로 개혁・개방정책의 추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중국 지도부의 認識變化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된다.

建設에 유리한 국제환경의 조성, ② 獨立自主의인 외교정책의 추진, ③ 新國際秩序에서의 역할 증대 등이 강조되고 있다. 특히 독립자주 외교정책의 추진과 관련하여 모든 형태의 霸權主義, 強權政治, 軍備競爭,<sup>47)</sup> 侵略行爲를 반대하는 동시에 중국의 主權 및 民族利益에 관련된 문제에 있어서는 어떠한 압력에도 굴복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sup>48)</sup>

그 밖에 중국은 새로운 국제질서 형성과정에 능동적으로 참여하여 자신들의 고유한 地位와 役割을 확보하고자 하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즉 새로운 국제질서하에서는 더 이상 일부 국가가 국제문제를 獨占하거나 操縱할 수 없다는 점을 전제하고 앞으로 중국이 유엔 安保理 常任理事國으로서 유엔의 각종 활동에 적극 참여할 것이라는 점과 社會制度 理念의 차이에 관계 없이 모든 국가와 우호협력관계를 발전시킨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sup>49)</sup>

#### IV. 結論

1989년 6·4천안문 사건 이후 중국은 政治體制改革, 政治民主化에 대한 대내적 요구와 소련·동구의 급격한 변혁으로 인해 가중된 서방세계

47) 특히 군축문제와 관련하여 14全大會 政治報告는 “중국은 公正·合理·全面·均衡의인 軍縮을 주장하며, 일부국가들이 군축을 거론하고는 있지만 그들의 尖端武器에 대해서는 진정한 군축을 실천하지 않았다”고 지적하고 있다. “14全大會 政治報告 요약문”, 「人民日報」, 1992년 10월 15일.

48) 이러한 입장은 중국이 주로 對美關係에서 강조해 왔던 것이다. 즉 중국은 미국의 ① 중국 人權狀況 비난, ② MFN연장에 대한 조건부과 및 시장개방압력, ③ 臺灣에 대한 무기판매 결정 등에 대해 國家의 獨立, 主權 등 基本國益에 관계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어떠한 압력에도 굴복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 물론 중국의 이러한 강경한 입장은 事案에 따라 유연한 태도를 보일 가능성마저 배제하는 것은 아니다.

49) 이와 함께 “중국은 국제교류과정에서 자신의 社會制度나 理念을 다른 국가에 강요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다른 국가가 그들의 사회제도나 이념을 중국에 강요하는 것을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데 이는 곧 「平和演變」의 위협을 의식한 것이다. 「14全大會 政治報告 요약문」, 「人民日報」, 1992년 10월 15일 참조.

의 「和平演變」 위협 등 자신들의 표현대로 대내외적 「兩面攻擊」을 받아 왔다. 또한 대내외적 곤경을 타개하기 위한 제반 정책 · 노선의 수립 · 집행과정에서 지도부의 갈등이 심화되었다. 그리고 당지도부의 보혁갈등은 기본적으로 개혁 · 개방정책의 지속적인 추진을 통한 경제발전 우선 정책을 고수하려는 鄧小平 중심의 개혁세력과 이를 제어하려는 보수 세력의 主張과 說得이 반복되는 과정이었다.

1992년 1월 鄧小平의 「南巡講話」는 비록 일시적으로 보수세력의 불만을 가중시키기도 했지만 결과적으로 개혁세력이 개혁 · 개방정책을 확대 · 강화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즉 개혁세력은 대내적 체제변혁 요구 및 서방세계로부터의 「和平演變」 위협을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탈출구는 개혁 · 개방의 확대를 통한 경제발전과 인민들의 생활수준을 향상시키는 것이라는 鄧小平의 입장에 따라 개혁 · 개방정책을 가속적으로 추진하면서 이를 지원하기 위한 대외정책의 조정에 역점을 두어 왔다. 뿐만 아니라 자신들의 정책노선의 지속적인 추진을 보장할 수 있는 개혁파 중심의 鄧小平 후계체제 확립에 노력을 기울여 왔다.

中國共產黨 第14次 全國代表大會는 그 동안 개혁세력이 의도해 온 정책방향을 더욱 확고히 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 즉 개혁세력은 보혁갈등의 핵심이 되어 온 「하나의 中心과 두개의 基本點」, 「右에 대한 警戒와 左의 防止」<sup>50)</sup> 문제에서 명확한 결론을 내림으로써 그 간의 보혁 갈등을 일단락지었을 뿐만 아니라 鄧小平 후계체제 확립, 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 확립을 위한 기반을 확고히 했다. 따라서 앞으로 중국지도

50) 이 문제와 관련, 14全大會 政治報告는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리고 있다. ①「右」는 4개 기본원칙을 부정하고 資產階級自由化를 도모하는 것이며 「左」는 和平演變의 주요 위협이 경제영역에 있다는 인식하에 개혁 · 개방을 부정하고 심지어 階級鬭爭思想을 경제건설에 연계시키려는 것이다, ②「右」가 사회주의를 소멸시킬 수 있지만 「左」역시 사회주의를 소멸시킬 수 있다, ③「左」를 강조하면 할 수록 革命의이라고 인식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며 1957~1977년의 20년간 중국공산당이 행한 過誤의 주요 원인은 「左」에 있다, ④「右」를 경계해야 하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나 「左」를 방지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14全大會 政治報告 要約문”, 「人民日報」, 1992년 10월 13일 참조.

부내에서는 개혁·개방정책의 필요성 혹은 지속여부를 둘러싼 갈등은 현저하게 감소될 것이다. 그러나 14全大會의 政治報告에서도 지적된 바와 같이 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 추진은 중국의 經濟基礎 및 上部構造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며 그 과정에서 ① 사회주의 체제·이념과 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간의 不協和音, ② 中央과 地方, 國家와 企業의 갈등 심화, ③ 階層간의 갈등 심화 등의 문제들을 둘러싼 당내 의견대립은 불가피할 것이다. 왜냐하면 바로 이러한 문제들은 개혁·개방정책의 확대, 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 추진 등으로 인해 더욱 심화될 수 밖에 없는 문제인 동시에 향후 「社會主義 中國」의 死活이 걸려있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우선 중국지도부는 개혁세력, 보수세력을 불문하고 사회주의체제·이념을 고수한다는 원칙에서는 異見이 없다. 즉 개혁세력은 개혁·개방정책의 확대·강화가 사회주의 체제·이념을 고수하는데 장애가 되지 않으며 兩者가 相互矛盾의 관계에 있지 않다는 점을 강조해왔다. 그러나 「社會主義 市場經濟體制」를 지향하는 최근의 움직임을 감안할 때 「중국적 특색을 지닌 사회주의」, 「社會主義 初級段階論」과 같은 기존의 理論과 論理構造만으로는 사회주의 체제·이념과 시장경제체제의 양립 가능성을 제대로 설명하기가 어렵다. 따라서 앞으로 중국은 어느 세력을 중심으로 지도체제를 구성하건간에 이 문제를 우선적으로 해결하여야 하며 이 과정에서 지도부의 의견대립이 초래될 수 있다.

개혁·개방정책의 확대와 더불어 추진된 中央權力의 分散과 地方의 自律權 擴大, 지역간 경제발전의 불균형, 국가와 기업의 갈등 등의 문제 역시 앞으로 중국이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인 동시에 지도부의 대립을 재발시킬 수 있는 문제다. 그동안 등소평은 四個現代化의 기반조성, 거점확보라는 측면에서 남부 연안의 경제특구와 같은 일부 지역의 「先發展, 先富裕」가 불가피하다는 점을 강조해왔다. 그러나 일부 연안지역의 경제성과가 내륙지역의 경제발전을 제대로 촉진하지 못하고 오히려 양자의 격차가 확대되는 경향을 보이면서 내륙지역의 불만이 가중되어 왔다. 뿐만 아니라 같은 沿岸地域, 大都市간에도 국가의 경제발전전략 중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기 위해 상호대립하는 地域利己主義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多元化된 利害關係와 「階層」의 발생에 따른 상호간의 갈등심화 또한 중국이 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를 발전시키는 과정에서 직면하게 될 불가피한 문제다. 개혁·개방 이후 중국사회의 다원화 정도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과거에 비해 중국사회가 경제관계를 중심으로 다원화되었다는 것은 염연한 현실이며 일각에서는 「中產階層論」<sup>51)</sup>까지 대두되고 있다. 중국지도부는 이러한 관점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를 취해왔으나 점차 “78년 이후 다양한 經濟形式과 經營方式이 출현함으로써 기존의 所有制構造가 변화했고 이에 따라 階級, 階層構造 및 계층간의 權力, 利益分配에 새로운 변화가 발생했다”<sup>52)</sup>는 중국내 일부 학자들의 관점을 수용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다. 따라서 중국지도부가 앞으로 기존의 階級概念 대신에 階層concept을 통해 다원화된 중국의 사회 경제적 관

51) 중국의 中產階層에 관한 구체적인 논의는 何建章, “論中產階級,”「社會學研究」, 1990年 第2號, pp. 1~2; Richard Kraus, “Eastern Europe as an Alternative West for China's Middle Class,” *Studies in Comparative Communism*, Vol., XXII, No.4(Winter 1989), p. 336 참조.

52) 이러한 관점을 갖고 있는 학자들의 구체적인 주장은 다음과 같다. ① 개혁·개방은 중국의 社會關係, 社會構造의 전면적인 재구성을 촉구하고 있다. ② 개혁의 실천과정에서 社會主義初級段階에서의 社會分化 허용여부, 資產階級의 허용여부, 계층간 經濟·社會的 地位의 差別 인정여부 등의 문제가 제기되었다. ③ 이들 문제들을 더이상 회피할 수 없으며 명백한 결론을 갖고 있었던 것처럼 보이던 기존의 이론들은 이러한 문제의 해결에 매우 無力하다. ④ 이들 문제의 해결이 없이는 개혁의 방향을 파악할 수 없으며 사회의 集團利益을 조절하는 原則과 根據를 상실하여 올바른 階級, 階層制度를 수립할 수 없다. ⑤ 따라서 社會關係의 調和喪失과 社會秩序의 紊亂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社會分化 현상에 대한 올바른 연구와 올바른 階層·階級制度의樹立이 중요하다. 陳碩, “論中國社會主義初級段階的社會分化和階級階層制度,”「上海社會科學」, 1988년 10월호, pp. 35~36; 朱慶芳, “十年來我國各階級, 階層結構演變的分析,”「社會學研究」(中國社會科學院 社會學研究所) 1990년 3호, p. 1; 張宛鵬, “近期我國社會階級, 階層研究綜述,”「中國社會科學」, 1990년 제5기, pp. 174~175; 陸學藝, 張厚義, 張其仔, “轉型時期農民的階層分化－對大, 劉莊, 華西等13個村莊的實證研究,”「中國社會科學」, 1992년 제5기, pp. 137~151 참조.

계를 설명하고 이들간의 갈등을 완화시키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의견대립이 발생할 소지가 많다.

이상에서 지적한 문제들은 중국이 改革·開放政策, 社會主義 市場經濟를 지향하는 한, 어느 세력이 黨內 優位를 점하는 것과 별관계 없이 중국지도부가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다. 그리고 이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또 다른 改革과 變化를 필요로 할 것이며 이 과정에서 지도부내의 대립과 갈등 등 상당한 진통이 수반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대립은 점차 개혁·보수진영간의 極限對立이나 權力鬭爭의 성격보다는 주요 정책결정·집행과정에서 상이한 의견이 대립하는 형태를 띠게 될 것이다. 또한 鄧小平·陳雲으로 대표되는 혁명일세대 死後의 중국공산당 지도부는 어느 한사람의 의사에 따라 정책방향이 좌우되는 소위 「一言堂」의 색채를 벗어나 政治局 혹은 政治局常務委員會를 중심으로 한 集團指導體制를 구성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감안할 때 주요 정책결정은 점차 現實과 大勢를 수용하고, 對立보다는妥協을 중시하는 制度化된 協商·論議過程을 거치게 될 것이다.

## Policy Conflicts in the Chinese Leadership and the Basic Line of the 14th National Congress of the CCP

Heungho Moon, Ph. D. (RINU)

After the turmoil of 1989 and the failure of other ruling communist parties to devise a successful reform strategy, the Chinese leadership emphasized the stability and integration of the Chinese Communist Party (CCP). Nevertheless, conservative-reformist conflicts in the Chinese leadership deepened in the process of setting up economic policy directions and devising measures to create peaceful evolution after the Tiananmen incident.

Deng Xiaoping's "*Nanxunjianghua*" of January 1992 provided a momentum to end up conservative-reformist conflicts. Namely, Deng made it clear that the only way for China to survive was to develop its economy and to improve its people's standard of living, and for these, he also put emphasis on more rapid and radical pursuit of reform and an open-door policy. Moreover, the 14th National Congress of the CCP called for accelerated national development featuring the establishment of a socialist market economy and further opening to the outside world.

Although conservative-reformist conflicts in the Chinese leadership seemed to be allayed, it is unlikely that the conflicts have been fundamentally settled, and there remains some possibility that conflicts may recur. In particular, there is a high possibility that confrontations in the leadership can take place in the process of dealing with generation change and side-effects which the Chinese leadership is facing; such as

the cacophony between the socialist system or ideology and the capitalist mode of production and management and the deepening of regional conflicts and conflicts among social strata accompanied by the modernization process. Nonetheless, such confrontation will not have the characteristics of extreme confrontation between conservatives and reformists or a power struggle. Henceforth, the policy-making process will reflect actual situations and the mainstream, through institutionalized negotiation procedures which cherish compromise rather than confrontation.